



## 국내정보

###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

- 금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은 총16조888억원(정부예산의 13.6%)로 작년17조 2,275억원보다는 6.6% 감소했으며, 도시교통난 완화, 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수해방지 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 ※ 추경(12,818억원)을 제외한 본예산(15조9,457억원) 대비 0.9% 증가
- ※ 정부전체대비 비중(3위) : 교육부 21.2%, 국방부 14.9%, 건교부 13.6%
- 금년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세입여건 악화(2003년 대비 0.2% 증가)와 복지·국방·교육 등 타부문 소요 증가에 따라 SOC예산(2003대비 6.1% 감소)을 축소 편성 한데 기인한다.
- 도로·철도부문은 그 동안의 투자확대와 작년도 추경지원(12,818억원)을 감안하여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c)	2003대비 증감율	
	본예산(a)	추경포함(b)		c/a	c/b
합 계	159,457	172,275	160,888	0.9	△ 6.6
도 로	81,834	90,232	80,363	△1.8	△10.9
철 도	33,379	35,870	31,544	△5.5	△12.1
공 항	3,476	3,803	3,617	4.1	△ 4.9
수 자 원	16,764	17,065	16,861	0.6	△ 1.2
주택도시	8,486	9,706	9,714	14.5	0.1
광역·대중교통	3,930	3,930	5,520	40.5	40.5
지역개발	2,776	2,857	2,925	5.4	2.3
물 류	565	565	744	31.7	31.7
기 타	5,246	5,246	6,600	25.8	25.8
국고채무(도로)	3,000	3,000	3,000	-	-

다소 감소하였으나, 도시교통난에 따른 혼잡비용과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대중교통, 물류시설 투자 등을 확대하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과, 수해 방지를 위해 치수사업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 ○ 주요 역점 사업

#### ① SOC는 동북아물류중심실현과 대도시교통난완화

- 인천국제공항은 물류·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주로·화물터미널 등 2단계 확장공사에 1,374억원(2003년 685억원)을 배정했으며, 관세자유지역조성을 위하여 국고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 경부고속철도는 2004년 4월 1단계 완공을 위한 사업비와 2단계 일부 노반공사비 3,935억, 호남고속철도 설계비 30억을 반영
- 간선도로와 일반철도는 그동안의 투자 확대와 작년도 추경 지원(1조원)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하여, 도로분야는 8조363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10.9% 감소, 일반철도는 1조8,552억원으로 15.4% 감소
-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4,420억원을 배정 2003년에 비해 56.2% 증가, 지하철에 7,399억원을 배정 2003년에 비해 21.2% 증가

#### ② 서민·중산층 주거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 [국민임대주택(2004년 10만호, 7,428억원, 향후 10년간 총100만호)] 소형 평형(14평)에 최저 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비율을 40%(현행 30%)로 확대
  - \* 입주자 보증금 900만원 454만원으로 인하(월임대료 : 117천원)
-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1,400억원)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주택단지의 보육시설·장애인 재활시설 등 건립을 위한 주거환경개선(300억원)을 추진

#### ③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해방지·교통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사업 지속 지원

- 댐시설이 “최대가능강수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 건설 된 댐(25개) 중 9개댐의 보강사업을 지원(629억원)
-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제방 축조 및 노후제방(낙동강등 76개소, 85km, 1,726억원)의 보수·보강을 적극 지원
- 도시철도 내장재 중 화재발생 취약부분(바닥·의자등)을 불연재로 교체하여 사고 예방(2004년 665억원, 1,244량)
-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低床버스 시범 도입을 지원(2004년 30억원,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50% 지원, 60대 구입)

## 2004년말 고속도로 3개노선 신설 및 확장개통

- 내년도 고속도로는 총 2조6,225억원을 37개사업에 투입하여 이중 3개노선을 개통하고, 3개노선을 신규착수할 계획이다.
- 내년도에 개통되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81.4km, 4차로 신설), 대구-포항 고속도로(68.4km, 4~6차로 신설), 동해고속도로 강릉-동해(56.1km(이중 15.5km는 기개통), 2 4차로 확장)로 예산을 집중투입('04예산 : 충주- 상주 2,978, 대구-포항 3,954, 강릉-동해 2,680억원)하여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본 3개 노선에는 내년까지 총 5조4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개통시 연간 4,2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간은 그간 여주-충주(41.6km, 2002개통), 상주-구미(28.6km, 2001개통)간만 개통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말 충주-상주간 개통으로 여주에서 구미까지 전구간 개통됨으로써, 정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최대 20%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전환 되어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물류비 절감 850억원) 또한, 충주-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상주에서 문경, 수안보 온천 등으로 가는 길이 예전보다 약30분 빨라지고, 이용이 더욱 편리해져 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포항 고속도로는 구미, 대구, 포항권과 국가산업의 전진기지인 포항신항만의 수송로 확보로 예전보다 약50분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수송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 중부내륙, 중앙선과 연계교통망을 형성,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물류비 절감 2,6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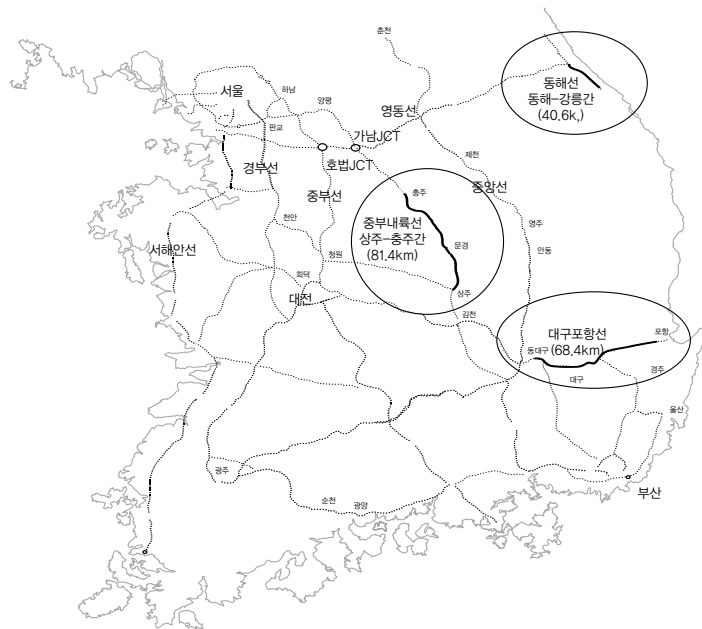
## 국내정보

- 상습지정체구간인 동해고속도로 강릉~동해간은 2 4차로로 확장되면서 예전보다 20분이나 빨라져 강원, 동해안 지역의 관광객 확보 및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류비 절감 750억원)

### 2004년 개통

(단위 : km, 억원)

구분	사업명	연장	차로수	기간	사업비	'04.12	개통시기	물류비 절감
계		205.9			50,487	9,612		4,200
신설	소계	149.8			36,786	6,932		3,450
	충주~상주	81.4	4	'97~'04	17,154	2,978	'04. 12	850
	대구~포항	68.4	4~6	'97~'04	19,632	3,954	"	2,600
확장	강릉~동해	56.1	2→4	'98~'04	13,701	2,680	"	750



[그림 1] 2004년 고속도로 개통 노선도

## 2004년 국도확포장 착수계획(47개 구간, 384.2km)확정

- 광주-이천(성남-장호원 3, 4공구) 국도 3호선 신설 등 일반국도 36개 구간(334.8 km)과 국도대체우회도로로 11개 구간(49.4km) 등 국도 47개 구간이 새로이 착공된다.
- 우리나라의 도로 총연장은 '02년말현재 96,037km이나, 도로건설이 최근 30년간 이루어져 도로 Stock이 선진국의 1/3~1/4에 불과하며, 고속도로와 함께 간선망을 이루는 국도는 14,232km로서 이마저도 4차로 이상 비율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한, 전국 교통혼잡비용 21조1천억원중 7대 도시가 58.4%를 차지하는 등 도시부 교통문제 해소가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하에, 금년도에 일반국도 36건을 신규로 착공할 계획이다.
- 또한, 도시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체증이 집중되는 市管內 國道구간을 우회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금년에 11건 착공하는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03년 9건)할 계획이다.
- 도로건설로 인한 고용효과가 10억원당 45명, 1,000억원 투자시 2,700억원의 편익(운영비, 시간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는 등 고용유발효과 및 편익이 지대하여 신규로 착수되는 국도사업은 최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물론 국도 4차로 이상 비율이 50% 수준에 달하는 2010년경에는 국가물류비가 선진국 수준(GDP대비 미국 10.1, 일본 9.6%)으로 낮아져,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금년부터는 도로의 기능뿐 아니라 안전, 환경, 경관에도 특히 역점을 두어 친환경적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참여형 도로건설]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인구당 도로연장(km/천인)	1.9(1)	9.1(4.8)	22.8(4.8)	6.3(3.3)
면적당 도로연장(km/km <sup>2</sup> )	0.9(1)	3.1(3.4)	0.6(0.7)	1.6(1.8)
차량당 도로연장(km/대)	7.4(1)	16.3(2.2)	30.8(4.2)	15.0(2.0)
국토계수도도로밀도(km/√면적·인구)	1.3(1)	5.3(4.0)	3.9(3.0)	3.1(2.3)

## 200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12건 착수

-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와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확·포장사업 12건을 2004년도에 신규 착수하기로 하였다.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가에서 설계를 실시한 후 공사비를 지자체에 지원하면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시행되며 사업착수 초년도에는 발주설계, 총사업비 협의, 발주공고기간 등 행정소요일수와 용지보상기간 등이 필요하여 1건당 년내 집행이 가능한 10억원씩만 예산을 책정하였다.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2002.7월에 수립한『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지역별 안배를 위하여 지역별로 매년 1~2건씩 착수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69건을 시행중이다.
- 국가지원지방도의 확·포장사업을 통하여 지역별 교통애로 구간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2004년 국가지원지방도 신규착수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km)

사업명	위 치	연 장	총사업비	'04예산
풍덕천-금곡IC	경기 용인 수지 풍덕천-성남 금곡동	3.0	33,000	1,000
법원-상수	경기 파주 법원 신릉-양주 남면 상수	11.5	94,100	1,000
춘천-신남	강원 춘천 신동 중리-신동 팔미	2.5	36,500	1,000
위림-명지	충북 제천 금성 위림-제천 명지동	5.9	21,300	1,000
남일-문의	충북 청원 남일 고은-청원 문의 미천	6.8	58,300	1,000
장기-남면2차	충남 공주 장기 금암-연기 남면 송담	6.6	81,400	1,000
정천-상전	전북 진안 정천 월평-진안 상전 수동	4.3	49,000	1,000
봉래신금-하촌	전남 고흥 봉래 신금-봉래 외초	7.0	57,600	1,000
옥성-선산	경북 구미 옥성 덕촌-구미 선산 이문	3.5	47,600	1,000
한림-생림	경남 김해 한림 가동-김해 생림 사촌	9.9	113,900	1,000
표선-성읍	제주 남제주 표선 표선-표선 성읍	6.3	63,600	1,000
초지대교-온수	인천 강화 길상 초지-갈상 온수	6.3	47,300	1,000

## 건설현장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업자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부패원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축·철도·항만·도로·하천공사 등의 100여 곳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 및 발주기관의 감독소홀 사례가 400여건 이상 적발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공공 발주공사 현장 30여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등 위법사례 150여건이 적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위법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현장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시감시정보망 구축 및 직접시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건교부에서는 지난 10월말 산하 지방국토청 발주공사 33개 현장의 하도급 부조리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하도급 등 100여건을 적발한 데 이어, 건설현장의 부조리 근절에 관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장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는 부조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현황, 기술자 현장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을 정보망에 입력토록 의무화하던 것을 내년부터 1억원 이상 공사(금액기준 전체공사의 98%)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정보 등을 연계·종합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구축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는 1명의 기술자를 여러 공사현장 또는 여러 업체에 중복·위장 배치하거나, 저가하도급한 후 이를 위장하기 위한 이면계약, 중층 재하도급 구조 등 건설공사 현장에 고질화된 부실·부패 소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공사수주후 일정율의 커미션만 받고 공사를 일괄전매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도 추진된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는 수주후 30일내에 자신이 직접시공할 공종, 투입인력 등에 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며, 11.14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허위실적제출시 처벌강화 등 건설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 건교부는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리자의 전문기술력 향상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내년중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설정보화, 2007년까지 로드맵 확정

-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건설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 CALS/EC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 건설CALS/EC(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Electronic Commerce) :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자·관련업체간 인터넷을 통해 교환·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 본 계획은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지식&정보’를 상정하고 2007년 정보화 수준을 현재보다 2배 향상시켜 지식정보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건설정보화수준 : 2002년 44점(전체산업평균 51점) 2007년 8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는 도면·문서 표준정비, 개발시스템의 운영·확산, 건설지식 공유환경 구축, 건설부문 IT응용기술 연구개발, 건설정보화 지원체계강화 등 5대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비용은 총 517억원이다.
- 2005년까지 건설정보 유통기반인 도면·문서 표준화와 개발시스템(아래)의 운영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확산에 주력하고, 2007년까지는 건설지식 공유환경 구축, 건설 IT응용기술 연구등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 2007년 본 계획이 완료되면 건설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처리기간은



### 개발시스템 현황

(단위 : 백만원/km)

개발시스템	주요기능	적용현황
건설인허가 시스템	건설인허가업무의 디지털화 (허가신청, 접수, 검토, 처리결과 발송 등)	운영단계 (건교부 6개지방청)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공사관리업무의 디지털화 (기획/설계/시공 등 사업관리)	
용지보상 시스템	용지보상업무의 디지털화 (토지등 협의보상, 수용재결 등)	
건설사업정보교환 시스템	건설사업참여자간 정보유통 (공정/품질관리, 설계도서 등 승인)	
시설물유지관리 시스템	시설물유지보수업무의 디지털화 (현장점검, 공사이력 등 정보관리)	시범운영단계 (익산국토청, 제주청)

50%까지 단축되고, 설계도서는 80%이상 감축되므로써 연간 설계비 1,400억원과 건설공사비 1.2조원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설립·운영

- 건설교통부는 기존 도로상의 도로표지판 누락, 안내의 연계성과 일관성 결여, 도안 오류 및 영문표기 오기 등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도로관리청이 인터넷에서 전국의 도로표지 정보를 관리·공유·분석 할 수 있는 도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 전국 각급 도로상에 산재 되어 있는 13만여개의 도로표지를 250여개 도로관리청별로 각각 설치·관리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는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를 활용하여 기존 도로상 잘못된 도로표지 설치 관리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토록 권고하고, 신설 개축하는 간선도로의 도로표지에 대하여 설치전에 적정성을 검토 받도록 하여 잘못된 도로표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토록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로이용효율을 향상시켜 교통소통원활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운영실적 : 기존 도로상 잘못된 도로표지 개선권고 1건

신설·개축 도로 사전검토 38건 등 39건

○ 건설교통부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 사이트(www.e-roadsign.com)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잘못된 도로표지판은 누구나 신고하게되면 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민원인의 제의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선토록하고 있다.

###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 편리해진다

○ 건설교통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이제까지는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만이(상·하수도 : 11개 업체 12개 범용프로그램 품질인증) 개발되어 활용되었으나, 이번에 도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상·하수와 도로를 구분하거나 도로와 상·하수도가 통합된 시설물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설계서에 따라 범용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1998년부터 市급도시(81개)를 대상으로 2002년까지 19개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물전산화를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30개 지자체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종전의 상·하수도에서 도로까지 범용프로그램의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는 검증된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구입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지고 유지관리에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기본설계서와 품질인증기준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토지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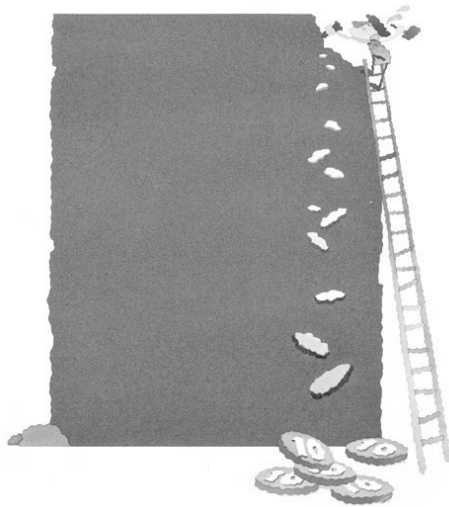
## 도로 중앙분리대 다양화

-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의 기능이나 교통 특성에 적합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건설교통부는 중앙분리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고 획일적으로 가드레일이나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의 기능이나 지형의 상태, 교통 특성을 감안한 중앙분리대 설치 지침을 개발하여 새로 건설하는 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며, 기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거쳐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급경사 내리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지형, 종단 경사구간의 예방, 내리막 종단경사도, 사고 가능성,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해 긴급 제동장치 설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비로 인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수막현상을 없애는 배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악천후 시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 국내 도로가 굴곡도 심해 전방의 도로나 교통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한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밖에 운전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주변 도로에 교통통제 및 도로운영관련 시설 외에 허가되지 않은 각종 시설을 철거하고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 공사장 방진벽 의무화

- 내년부터 건설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50m 내에 주택·상가 건물이 있을 경우 높이 3m 이상의 방진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등록대수 1천대를 넘는 불도저·굴삭기·지게차·로우더·로올러·기중기 등 6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설된다.
- 환경부는 9일 생활환경 개선 및 대기환경을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0일자로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및 확산을 막고 공사장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3.0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건물해체 작업의 경우에도 방진막을 설치토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에 건축폐기물 처리업 및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는 콘크리트 펌프트럭·믹서트럭·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에 대해서만 관리했으나 내년부터는 굴삭기와 불도저 등 등록대수 1천대 이상의 건설기계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작·판매되는 130kW 이상의 굴삭기·로우더·지게차 등 3종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기준이 1kWh당 이산화탄소(CO)5.0g, 탄화수소(HC)1.3g, 질소산화물(NOx)9.2g, 입자상물질(PM)0.6g 이하 수준(Tire-1)으로 규정되고 7월부터는 엔진출력 130kW 미만 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2005년부터는 이들 3종을 포함해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 등 총 6종의 건설기계에 대해 1kWh당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농도의 합 6.6g, 입자상물질 0.3g 이하 수준(Tire-2)으로 강화키로 했다.



## 한국도로공사 중기경영계획발표 및 비전선포식 개최

### ○ 비전 선포식



[비전 선포 현장]

-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 ‘우리는 보유자산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최상의 도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으뜸 국민기업이 된다.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 인재를 존중하고 차별화 된 기술을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사업구조를 혁신한다.’
- 공사는 12월 29일 오후 오점록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사 각 실장, 처장, 지역본부장, 직할기관장, 지사장, 서해대교관리소장, 주요 관문 영업소장 그리고 본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이 수많은 토론을 통해 만든 이와 같은 기업이념과 비전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로 다짐했다. 또 기업이념과 비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공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짧고 독특한 문구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제정하여 기업이념과 비전의 공유와 확산을 촉진하기로 했다.
- 이에 앞선 이날 오전 경영진과 본사 부처장급 이상 직원, 산하기관장, 관문영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기경영계획 발표회를 갖고 이의 실현을 다짐했다.

### 제2영동고속도로 민자 유치

- 서울~강원도 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구간 56.08km의 제2영동고속도로 왕복 4차선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이 중심이 되어 LG건설, 금강종합, 코오롱, 포스코, 동부건설 등 6개 건설회사가 참여해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현재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중이다. 또 이달말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초 건설교통부에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우선순위에 포함될 경우 2005년 6월 착공해 오는 2009년 완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에따라 이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에 설명하며 조기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주시와 함께 추진 경과에 따라 최소한의 일정지분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 제2영동고속도로는 정부보조금 3,641억원(22.6%) 등 총 1조6,12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기존 영동고속도로에 비해 서울-원주간 운행거리는 18km, 주행시간은 19분이 각각 단축되는 등 교통량이 분산될 전망이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등과 접속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며 영동고속도로의 대체 기능 역할을 하게돼 강원 중부내륙권역은 물론 수도권과 30분대의 생활이 가능해져 물류·유통기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및 사업이전이 촉진돼 지방분권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한편 강원중동부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전자지불카드 서비스 규격 공개

- 한국도로공사(대표 오점록 <http://www.freeway.co.kr>)가 지난해말 시범 개통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용 전자지불카드 서비스 규격을 6일 공개했다. 이번에 규격이

공개된 전자지불카드는 접촉과 비접촉식 사용이 가능한 콤비형으로서 스마트카드 솔루션 전문업체인 하이스마트텍(대표 김정수 <http://www.hismartech.com>)이 개발한 것이다.

- 이 카드는 주행상태에서 자동으로 통행료가 징수되는 ETCS 징수(하이패스) 기능과 정차 상태에서 단말기에 접근시키면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비접촉식 징수(터치패스) 기능을 모두 사용하면서 선불거래 및 후불거래 기능을 모두 지원해 도로통행료 징수는 물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번 규격공개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표준을 산업계 전체로 확산시키고 카드개발업체간 특허 공방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스마트카드 시장을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융결제원, 비자캐시코리아, 마이비 등 전자화폐 시범사업자 3사는 규격에 맞춰 신규카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본 사업 개시후 이들이 개발한 전자지불카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 하이스마트텍은 현재 5만장의 카드를 공급했으며 △마일리지 적립 △할인 및 면제카드 △화물차, 고속버스 등 정기 이용자 부가 서비스 △ 고속도로 주유소, 휴게소 결제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한 장애인 카드 △인터넷을 이용한 충전 △도로공사 직원 신분증 및 사내 출입증 카드 △향후 타 기관 전자화폐 또는 교통카드와의 호환사용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